

확진자 연일 신기록...대선판 강타한 '코로나 변수'

뉴스 초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인 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이 대선 판세에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선 초반 판세를 뒤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챙기며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은 여당에는 대형 약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위드 코로나'로 인한 방역 실패와 연결되면서 '집권 여당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교체 여론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코로나19의 확산 기간이다. 코

확산세 못잡으면 與 대형약재

위중증·사망자 증가도 민감

발등의 불 민주당 상황실 가동

국민의힘, 백신관련 공약 내놔

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7000명 수준을 넘어선다면 패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에서는 방역의 고삐를 짊 수밖에 없어 생계에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와 누적 사망자 증가 여부도 민감한 이슈다. 당장, 백신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훗날까지 들고 나선 상황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신고한 사례가 1340명(지난 7일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노령층에 부스터 샷을 적극 권장

하고, 12-18세 청소년 층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심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고등학교 2학년생의 국민청원 글에 대한 국민 동의가 지난 7일 현재 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이달 중순 내에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대선 초반 판세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변수가 있어 정부의 안정적 관리에 장담하기 어렵다. 이재명 후보의 '12월 여론조사 골든크로스' 목표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윤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코로나 상황실'을 신설했다. 당이 적극적으로 현상

상황을 반영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또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12-18세 청소년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들어갔다. 방역 패스제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적용 시점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부스터 샷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한 방역 패스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와 병행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을 보다 강력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위기가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민심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코로나19 장궤로 여당 위기가 컸지만 결과는 대승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민심이 집권 세력에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당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갖고 보상금과 치료비를 선 지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작용 인과성 책임의 정부 부담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와 운영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 확보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대책 가운데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면서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 수권경쟁의 자세를 보여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선훈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대선훈 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주 광주 선대위 기발한 선거운동 전략 봇물

청년 위원장 9명 등 참석 첫 회의

'2030 청년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선훈 선거대책위원회가 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선거운동 전략을 제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대선훈 선대위는 이날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등 공동선대위원장 9명을 비롯해 선대위 주요 인사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선대위원장들은 다양한 선거 전략을 내놓았다. 강한솔 위원장은 '기필코'의 전라도 사투리인 '기언치'를 선대위 별칭으로 하자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합니다' 구호에 '기언치'를 덧붙여 국민이 바라는 사명을 '기필코' 이룬다는 결의를 광주 언어문화로 표현한 것이다.

김태진 위원장은 광주 곳곳을 발로 뛰는 '곰곰 투어'를 제안했다. 공동선대위원장 모두 이재명 후보라는 생각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비판과 쓴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전략이다. 송니영 위원장은 저탄소·친환경을 위해 선대위에서 전자문서와 개인 컵 사용 일상화를, 채은지 위원장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선거사무소를 제시했다.

송갑석 위원장은 "광주는 2030 청년들로 가장 먼저 지역선대위를 꾸려 민주당의 심장부, 민주주의의 부름답게 시대의 질문에 대답을 제시했다"면서 "모두 하나 돼 정권 재창출의 불씨를 햇불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은 송갑석 의원을 제외하고 만 18세 여고생, 변호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등 각계 청년층으로 채워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 대통령 "광주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미래 성장동력"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축사

"노동자·지역, 캐스퍼 열풍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전략이자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앞으로 정부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4월 광주형 일자리 공장 준공식에서 들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 청년은 '다녀보니 너무 좋습니다. 시설 좋고, 사람 좋고, 특히 밥이 제일 맛있습다'라는 말을 했다"고 소개

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노동자와 기업, 지역민이 함께 꿈을 키웠고, 캐스퍼(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한 자동차) 열풍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이제 전국 8개 지역, 9개 상생 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원·하청 간, 지역주민과 기업 간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전기차 클러스터부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길만 찾으면 정부는 언제든지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 국가의 미래를 열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한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유공으로 '일자리 위원회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설립해 지난해 6월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설립을 완공해 지난 9월 첫 생산품인 '캐스퍼' 차량을 성공리에 양산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주와 지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4월 완성차 공장인 GGM을 준공하고, 첫 모델인 경형 SUV '캐스퍼'를 본격 출시한 뒤 2만 5000여대 이상 예약이 완료됐으며, 12월 현재 56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대선 다자대결 윤석열 36.4%·이재명 36.3%

갤럽 조사...0.1%p차 박빙

리얼미터 조사 45.3% vs 37.1%

다자대결 구도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내 박빙의 접전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다투고 있다는 엇갈린 여론조사가 8일 잇따라 나왔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의뢰를 받아 이달 6~7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묻은 결과, 다자대결에서 윤 후보는 2주 전 대비 2.0%포인트 하락한 36.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0.8%포인트 내린 36.3%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6.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5%, 가칭 '새로운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1.0%로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우위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천3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묻은 결과, 다자대결 구도에서 윤 후보는 45.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후보는 2.0%포인트 상승한 37.1%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8.2%포인트로 지난 조사 격차보다 0.4%포인트 좁혀졌지만, 여전히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밖 흐름은 유지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0%,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5%로 뒤를 이었다. 김동연 후보는 1.6%였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수돗물 빛어울수 참!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원

맑고 깨끗한 섬진강 수계인 동복호와 주암호의 청정 원수를 가져옵니다.

엄격한 수질검사를 통과한 명품 수돗물

먹는물 수질 법정기준의 4배 이상 항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똑똑하고 안전한 수돗물

최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수돗물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안내

고지서 분실 걱정 없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요금할인도 받으세요!

Q. 수도요금 전자고지란? 요금고지서를 카카오톡톡, 핸드폰문자, 전자우편으로 받는 서비스

Q. 요금할인제도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 후 종이고지서를 미수령하는 수용가에 부과요금의 1% 할인(200~5,000원)

Q. 서비스 신청방법은? 전 화 : 관할 수도사업소 신청
인터넷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신청(water.gwangju.go.kr)

문의사항 안내 062-121

- 동부요금센터 062) 609-6901
- 서부요금센터 062) 609-6902
- 남부요금센터 062) 609-6903
- 북부요금센터 062) 609-6904
- 광산요금센터 062) 609-6905

2021년 "라벨없는" 친환경 빛어울수 생산

오직 깨끗한 물! 오롯이 광주시민에게!